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51회 임시회>

2017. 4. 2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이재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4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제안이유

○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정책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식기구로 설치하고, 주민복지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부서명을 변경, 팀이동 및 팀명칭 변경과 팀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정책관광국으로 정식기구로 설치
(안 제3조)
- 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의 일부 부서명 변경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팀 이동 및 팀명 변경(안 제6조)
- 다. 부서간 업무조정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팀 신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5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정식 국(局)으로 전환하고, 기능 및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본청 3국 1단 2실 23과 108담당을 4국 2실 23과 112담당으로 4담당을 증설하고, 읍·면 48담당을 51담당으로 3담당 증설과 정책사업단을 정책관광국으로 주민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고,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 지역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팀, 가창, 옥포, 현풍면에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른 팀이동, 팀명칭 변경 및 신설로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생활보장과)
보육지원팀 ← 아동보육팀(명칭변경)
 - 생활보장과 : 주거복지팀(건축과)
 - 희망지원과 : 장애인복지팀(←복지정책과)
 - 세 무 과 : 법인관리팀 ← 세무조사팀(명칭변경)
 - 징 수 과 : 자동차팀(신설)
 - 교 통 과 : 교통시설팀 신설 등입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군 인구 24만 시대에 걸맞게 조직변경과 업무조정, 팀신설 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단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장, 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사업단”을 “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군정홍보·예산·감사·조사평가·서울사무소”를 “기획·군정홍보·예산·감사·조사평가·지역인구정책·서울사무소”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부과·세무조사·과표·지방소득세”를 “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입관리·채납정리·채납처분·세외수입”을 “세입관리·채납정리·채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희망지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청소위생과”를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청소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기획·통합조사·통합관리·생활보장”을 “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청소년·보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청소년·아동보육”을 “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주거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자원·희망복지·드림스타트”를 “복지자원·희망복지·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공시설·주거복지·디자인”을 “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공시설·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행정·교통지도·차량관리·차량등록”을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정책사업단)”을 “(정책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사업단”을 “정책관광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노정·녹색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을 “경제노정·녹색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진흥·관광개발·문화재”를 “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국장·단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국·단·소”를 “국·소”로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장, 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1호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단장”을 “평생학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단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u>국장, 단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정책사업단</u>을 둔다.</p> <p>제4조 ①(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u>기획·군정홍보·예산·감사·조사평가·서울사무소</u>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p> <p>제5조(자치행정국) ①②(생략) 1.(생략) 2.<u>지방세부과·세무조사·과표·지방소득세</u>에 관한 사항 3.<u>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u> 등에 관한 사항 4. ~ 7.(생략)</p> <p>제6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u>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희망지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청소위생과</u>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복지기획·통합조사·통합관리·생활보장</u>에</p>	<p>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 ----- 국장 및 ----- ----- ----- -----.</p> <p>제3조(국의 설치) ----- -----<u>자치행정국·주민복지국·정책관광국</u>-----.</p> <p>제4조 ①(현행과 같음) ② ----- <u>기획·군정홍보·예산·감사·조사평가·지역인구정책·서울사무소</u> -----.</p> <p>제5조(자치행정국) ①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u>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지방소득세</u> ----- 3. <u>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u>-----.</p> <p>4. ~ 7.(현행과 같음)</p> <p>제6조(주민복지국)① ----- <u>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청소위생과</u>-----.</p> <p>② ----- -----.</p> <p>1.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청소년·보육지원</u></p>

<p>관한 사항</p> <p>2. <u>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청소년·아동보육</u>에 관한 사항</p> <p>3. <u>복지자원·희망복지·드림스타트</u>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제7조(건설도시국) ①(생략)</p> <p>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u>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공시설·주거복지·디자인</u>에 관한 사항</p> <p>5. <u>교통행정·교통지도·차량관리·차량등록</u>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제8조(정책사업단) ① <u>정책사업단</u>에 정책사업과·경제과·문화체육과·관광과를 둔다.</p> <p>② <u>정책사업단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경제노정·녹색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u>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4. <u>관광진흥·관광개발·문화재</u>에 관한 사항</p>	<p>_____</p> <p>2. <u>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주거복지</u></p> <p>_____</p> <p>3. <u>복지자원·희망복지·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u>_____</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설도시국)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1. ~ 3. (생략)</p> <p>4. <u>건축행정·건축지도·주택·공공시설·디자인</u>_____</p> <p>5.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u>에 관한 사항.</p> <p>6.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책관광국) ① <u>정책관광국</u>에 ---</p> <p>_____.</p> <p>② <u>정책관광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경제노정·녹색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u>-----</p> <p>3. (현행과 같음)</p> <p>4. <u>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u>-----</p>
--	---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설치기준)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4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제안이유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수요 조직의 신설과 급속한 지역개발로 업무량 증가와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가창면, 옥포면, 현풍면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일반직 및 지도직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819명 → 842명 (증 23)
 - 집행기관 정원 : 806명 → 829명(증23)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9조 제3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 조직의 신설과 급속한 지역개발로 업무량 증가와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가창면, 옥포면, 현풍면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일반직 22명과, 지도직 1명 등 총 2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 7명, 7급 5명, 8급 4명, 9급 6명과 지도직 1명 등 총 2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2017년 기준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증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19”를 “84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06”을 “829”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42	531	13	91	97	110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815	527	13	68	97	110
3급	1	1				
4급	6	4		1	1	
5급	39	25	3	3	2	6
6급이하 계	769	497	10	64	94	104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3			23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1			21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81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806명</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_____</p> <p>_____</p> <p>_____ 842명 _____</p> <p>_____.</p> <p>1. _____ : 829명</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 별표 3 】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출장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출장소	면
총 계	819	516	13	91	96	103	총 계	842	531	13	91	97	11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3	512	13	69	96	103	일반직 계	815	527	13	68	97	110
3급	1	1					3급	1	1				
4급	6	4		1	1		4급	6	4		1	1	
5급	39	25	3	3	2	6	5급	39	25	3	3	2	6
6급이하 계	747	482	10	65	93	93	6급이하 계	769	497	10	64	94	104
연구직 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 관						
연구사	2	2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직 계	23			23		
지 도 관	2			2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0			20			지 도 사	21			21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면 복지허브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일반직 및
지도직 정원 증원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 22명 (6급 +7, 7급 +5, 8급 +4, 9급 +6)
지도직 공무원 증원 : 1명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6급(24호봉), 7급(15호봉), 8급(8호봉), 9급(6호봉),
지도사(22호봉) 기준으로 작성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6,972,006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6,972,006천원 정
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6,972,006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계
세 입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지 방 세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의존재원							
세 출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인 건 비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재원 조달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1,292,377	1,341,487	1,392,464	1,445,377	1,500,301	6,972,006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4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제안사업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상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 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원칙, 위원회 기능 등의 실행화 방안 규정. (안 제11조 ~16조)
- 다. 주민참여 역력강화를 위하여 위원과 주민의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규정 명시(안 제18조)
- 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안 제19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제안사업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상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원칙, 위원회 기능 등의 실행화 방안 규정 (안 제11조 ~16조),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원과 주민의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규정 명시(안 제18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마련(안 제19조) 등 20개 조문으로 조례 전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1. 인건비 및 법정경비
2. 국시비보조금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단체의 단순 운영비 증액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내로 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2. 수립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4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장)
3.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용도 확대(안 제3조)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 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다.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 인하(안 제7조)

- 제4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를 “연 1%”로 변경

라. 전세점포 지자체 임대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등 점포 전세금
대여 지원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정(안 제15조)

5.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용도 확대(안 제3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연 2%”를 “연1%로 변경) 인하(안 제7조), 전세 점포 지자체 임대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등 점포 전세금 대여 지원으로 변경(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정(안 제15조) 등이며,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 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하며, 같은 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9. 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제4조제1호 중 “ 및 영 제3조의2”를 “ 및 법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대여”를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2%”를 “연1%”로 한다.

제10조 제목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세금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 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3항 중 “전세점포 지원”을 “전세금 대여”로 하고, “단위의 임대계약을 원칙으로 하되”를 “단위로 설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1%로 하고,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5%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여전세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사용수수료”를 “제4항에 따른 이자”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여전세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전세점포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연 2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의 범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2.(생략) 3.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u>전세 점포 임대지원</u> 4.~ 7.(생략)_ <u><신설></u> <u><신설></u> 8.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범위) ----- -----. 1.~ 2.(현행과 같음) 3. ----- ----- <u>점포</u> <u>전세금 대여</u> 4.~ 7.(현행과 같음) 8. <u>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u> 9. <u>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u> 10.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u>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단</u> 3.~ 5.(생략) 제5조(지원신청) ①(생략)	제4조(지원대상)----- ----- ----- 1.----- ----- <u>및 법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u> 2. ----- -----, <u>자활근로사업단</u> 3.~ 5.(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 ③ (생략)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 ⑦ (생략)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 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1%로 하되 연체시 연15%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② _____
_____ 지원 _____

_____.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연1%_____

_____.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점포 전세금 대여)①_____
_____ 점포 전세금 대여 _____

_____.

② 전세금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③ 전세금 대여_____단위로
설정하되_____ (_____)
_____.

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1%로 하고,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15%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

⑤ 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

<p>1. ~ 2. (생략)</p> <p>3. <u>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u></p> <p>4. <u>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u></p> <p>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p> <p>①(생략)</p> <p>② <u>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제16조부터 제17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16조(위원회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7조(위원회 운영)</p> <p>①(생략)</p> <p>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1. ~ 2. (생략)</p> <p>③ ~ ⑥ (생략)</p>	<p><u>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여전세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4항에 따른 이자-----</p> <p>4. <u>대여전세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전세점포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u></p> <p>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16조(위원회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회에 한하여 연임-----</u>.----- -----.</p> <p>제17조(위원회 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 -----.</p> <p>1. ~ 2.(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분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9.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4.]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과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별표

4.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 가.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나. 전세점포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다. 전세점포임대 및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 2017 자활사업 안내 주요내용

①자활기금

(3) 기금의 용도 p20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자활센터에 사업비 위탁 및 해당 시·도 자활기금의 일부지원 가능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 사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회보험료지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기금 활용

(3) '17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사업 내용 212p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 이자율 : 고정금리 연 3.0%이내(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이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자활사업 지원,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비용,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비용,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등으로 적극 활용